

# 오늘의 경제논단

사 설

2012. 2. 3 (금)

## 재벌 개혁

- 재벌 개혁, 경쟁력 죽이기 아닌 ‘오너 獨斷’ 견제로 (조선)
- 불쌍사나운 대통령과 각료들의 ‘재벌규제’ 비판 (경향)

## 협력이익배분제 도입

- 협력이익배분제 대기업들 실천에 달렸다 (서울)
- 느슨한 상생 합의, 그나마 성과 내려면 (매경)

## 경제 일반

- ‘빅 브러더 시대’ 대책은 없나 (중앙)
- 민주당 ‘票 낚기 복지 약속’ 해도 너무 한다 (동아)
- 성장 활력 살아야 복지 늘릴 수 있다 (한국)
- 잇따른 열차 사고와 교통대란 시민 안전이 위협하다 (한겨레)
- 워런 버핏에 대한 환상과 착각들 (한경)
- 직장도 동반성장위 허가받고 옮겨야하나 (한경)
- 국가대사 여수엑스포 백일도 안 남았다 (서경)

칼 럼

- 마녀사냥식 재벌개혁은 안 된다 (세계, 시론 / 조하현 연세대 교수·경제학)
- ‘반값 등록금’이 가져온 대학불신 (한경, 다산 칼럼 / 김영용 전남대 교수·경제학)
- 보편적 복지 경쟁 불붙는다 (한국, 아침을 열며 /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)
- 고졸 채용, 그 다음이 문제다 (매경, 테마진단 / 서승직 인하대 교수·건축학)

## 사설

## 재벌 개혁

## ■ 재벌 개혁, 경쟁력 죽이기 아닌 '오너 獨斷' 견제로 (조선)

민주당이 순환 출지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재벌 지배구조 개혁을 논의 중이고 한나라당도 中企 적합 업종 확대를 검토하는 등 정치권 쟁점이 '양극화 해소'와 재벌 규제로 좁혀지고 있어

-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재벌 개혁은 각국의 자국 기업 보호 흐름과 역행하는 것으로, 재벌 개혁이 규제 일변도로만 흐르면 삼성 등 대기업도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어
- 총수와 그 일가의 독단적 경영 형태를 민주적으로 바꿔나가면서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재벌 개혁이 진행되어야 하며, 그 이후 이익 공유 같은 세부적인 개혁을 추진해야

## ■ 불쌍사나운 대통령과 각료들의 '재벌규제' 비판 (경향)

정치권의 재벌규제 움직임에 대해 경제 각료들의 비판이 줄을 이어. 이는李 대통령이 "기업을 너무 위축시키면 투자와 고용이 줄 수 있다"고 정치권을 비판한 뒤 나타난 현상

- 하지만 지금 개혁의 도마에 올라있는 재벌의 일감몰아주기· 문어발식 확장· 서민형 업종 침투 같은 문제들은 이명박 정권의 親재벌정책을 통해 악화될 대로 악화된 것
- 대통령과 각료들이 이제 와서 재벌규제를 기업 때리기로 호도하고 경제 걱정을 늘어놓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. 지금이라도 정책 자세를 바꿔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

## 협력이익배분제 도입

## ■ 협력이익배분제 대기업들 실천에 달렸다 (서울)

동반성장위가 2일 대기업의 동반성장 실적평가 때 大·中企 '협력이익배분제'를 도입하는 곳에 가점을 주기로 합의한 것은 상생 및 협력방식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

- 재벌들이 자본력을 동원해 골목상권까지 장악하면서 자영업자들은 급속도로 몰락했으며, 납품단가 후려치기·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中企들은 생존의 한계상황으로 내몰려
- 대기업들로서는 당장 힘을 앞세운 이윤 극대화가 달콤할지 모르나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中企의 경쟁력이 뒷받침돼야. 동반성장과 상생은 대기업의 협조 없인 불가능해

## ■ 느슨한 상생 합의, 그나마 성과 내려면 (매경)

동반성장위가 大·中企 초과이익공유제 명칭을 '협력이익배분제'로 바꿔 시행하되 도입 여부는 기업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혀. 이는 제도 운영에 신축성을 부여한 것으로 긍정적인 변화

-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없인 동반성장이 성공할 수 없는 만큼 대기업들은 애플 등 IT업체들이 인도 협력업체와 이익을 배분한 사례 등을 참고해 진정성을 갖고 접근해야
- 또한 성과공유제 등을 실행하라는 사회적 압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56개 대기업이

협력사 등에 얼마나 잘했는지에 대해 동반성장지수를 정확하게 발표하는 것이 중요해

## 경제 일반

### ■ ‘빅 브러더 시대’ 대책은 없나 (중앙)

세계 최대 SNS 기업인 페이스북이 美 증권거래위에 기업공개 신청서를 제출해. 전문가들은 페이스북의 가치를 약 1천억달러로 보는데, 이는 페이스북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가치를 의미해

- 인터넷 기업들은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어. 이에 대해 사용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‘빅 브러더’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란 비판도 나와
- 각국 정부는 개인정보 수집의 부작용에 대한 대안 마련에 들어갔지만 우리 정부는 제대로 된 문제의식조차 갖지 못해. 하루빨리 SNS 시대에 맞는 정보보호법을 마련해야

### ■ 민주당 ‘票 낚기 복지 약속’ 해도 너무 한다 (동아)

민주통합당은 2일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고졸 청년들에게 1,200만원, 취업자에게는 2년간 월 50만원, 미취업자에게는 4년간 25만원, 창업자에게는 1,200만원을 나눠주겠다고 발표해

- 문제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것.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투표권을 가진 모든 청년에게 돈을 뿌리다 보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 빈곤층과 노년층 지원은 뒤로 밀릴 우려가 커
- 투표권을 가진 전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주려면 누군가는 돈을 벌어 세금을 내야 할 텐데 경제주체들이 배겨날지 의문. 이러다간 국가부도 위기에 몰린 나라꼴이 되고 말 것

### ■ 성장 활력 살아야 복지 늘릴 수 있다 (한국)

1월 무역수지가 24개월 만에 처음으로 무역적자를 내면서 한국 경제의 견인차인 수출에 경고신호가 켜져. 그 밖에도 시장 환경 악화를 예고하는 변수가 적잖아 마음을 놓기 어려워

- 수출 증대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OECD 어느 회원국보다 커. 조기에 무역흑자를 쌓지 못한다면, 한국 경제가 너무 일찍 저성장 시대에 접어든다는 우려가 커질 것
- 한국 경제는 수출 확대가 유일한 통로로, 총·대선을 앞두고 활발히 거론되는 복지 증대도 성장 없이는 신기루일 뿐. 복지에 쏠린 눈을 이제 성장으로 돌려야 할 것

### ■ 잇따른 열차 사고와 교통대란, 시민 안전이 위험하다 (한겨레)

2일 수도권 지하철 일부 구간이 얼어붙어 교통대란이 발생해. 강추위가 며칠 전부터 예고됐고 제대로 점검만 했다면 이런 사태를 예방할 수 있었던 만큼 변명의 여지가 없어

- 철도 사고는 국토부가 ‘공공기관 선진화’의 명분으로 구조조정을 밀어붙인 시점부터 현저히 증가했으며, 올해도 인력감축이 예정돼 안전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
- 같은 노선에 여러 운영사업자가 존재해 비상 상황의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근본적 문제. 효율성이 아닌 이용자 안전과 편익을 최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철도운영을 개편해야

### ■ 워런 버핏에 대한 환상과 착각들 (한경)

워런 버핏이 경영하는 제과점이 국내에 상륙해 이는 대기업들이 소위 ‘재벌 빵집’을 비난하는 여론에 밀려 베이커리 등의 사업에서 철수하는 상황에서 한동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여

- 버핏은 증권투자로 번 400억달러 중 310억달러를 빌 게이츠 자선재단에 기부해 한국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나, 그의 기부가 실은 상속세 회피 수단이라는 비난도 있어
- 그가 상속세 폐지에 반대하는 것도 상속기업 인수·합병으로 벅서해서웨이 그룹의 몸집을 불리려는 의도. 대기업 세력들이 버핏의 제과점에 대해선 뭐라고 말할 것인지 궁금해

### ■ 직장도 동반성장위 허가받고 옮겨야하나 (한경)

동반성장위가 2일 대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을 빼가지 못하게 하겠다며 인력스카우트심의위를 설치키로 해. 그러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런 식의 규제가 합당한 것인지 의문

- 중소기업에 한번 취직하면 계속 머물러야 한다는 발상은 오히려 중소기업 기피현상을 심화시켜. 관건은 우수인력이 자발적으로 중소기업에 들어가 계속 일하고 싶게끔 환경을 바꾸는 것
- 스톡옵션 등 젊은이들이 선호할 만한 보상시스템을 도입하고 경영을 더욱 투명하게 만들어야. 중소기업에서도 열심히만 하면 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

### ■ 국가대사 여수엑스포 백일도 안 남았다 (서경)

5월 12일부터 3개월간 여수 신항 일대에서 여수엑스포가 열려. 이를 통해 12조원의 생산유발효과, 5조원의 부가가치 창출, 일자리 창출 효과 등 경제적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돼

- 그러나 정권 말에 선거시즌이 겹치면서 5년전 유치 당시에 비해 국민의 관심과 열기가 식은 것 같아 안타까워. 귀한 손님을 불러놓고 대접이 소홀해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
- 지금은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한 시점. 이제 남은 기간 동안 경제효과를 극대화하고 관람객들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야

## 칼럼

### ■ 마녀사냥식 재벌개혁은 안 된다 (세계, 시론 / 조하현 연세대 교수·경제학)

재벌 개혁방안이 나온 배경엔 불합리한 하청구조 등 재벌의 잘못이 크나, 이러한 개혁이 재벌 정서를 업고 경제 원리와 규칙을 무시한 채 마녀사냥 식으로 이뤄져선 안 돼

- 재벌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으려면 경제적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보다 성숙한 시장을 만들어 서민, 영세상인, 중소기업 모두 상생하는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
- 재벌들은 지금까지의 관행적 잘못을 수긍하고,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억제하고 납품가격 후려치기 관행을 탈피하는 등 중소기업과의 공생관계를 진작시키려는 모습을 보여야

### ■ ‘반값 등록금’이 가져온 대학불신 (한경, 다산 칼럼 / 김영용 전남대 교수·경제학)

대학등록금이 세간의 이슈로 부각되면서 요즘 대학 체면이 형편없이 구겨져. 특히 국공립대는 법적 근거도 없이 거둬들인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까지 나와

- 이번 기성회비 건으로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도 문제가 크겠지만 더 심각한 것은 권위와 존경, 신뢰에 바탕을 뒀어야 할 교수와 학생간의 관계에 불신이 깊어질 것이라는 점
- 반값등록금은 대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대졸자의 취업난도 한층 가중시킬 것. 정치권은 표를 위해 등록금을 빌미로 대학을 압박하고 교수와 학생을 이간질해서는 안 돼

■ **보편적 복지 경쟁 불붙는다** (한국, 아침을 열며 /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)  
 한나라당의 정책노선 변화로 인해 ‘보편적 복지’가 상당부분 실현될 개연성이 커져. 이는 韓 정치사 최초의 사건으로, 복지국가로의 발전 전망을 밝게 하는 좋은 징조

- 역대 정부의 복지철학은 신자유주의에 따른 잔여주의 선별적 복지로, 국민 대부분은 복지를 시장에서 해결하고 국가는 탈락한 소수의 사람들만 선별적으로 보호한 것
- 이 같은 ‘신자유주의 경제 - 선별적 복지 체제’를 ‘공정·혁신적 경제 - 보편·적극적 복지 체제’로 바꾸는 것은 역동적 복지국가로의 패러다임 전환이자 우리 시대의 과제

■ **고졸 채용, 그 다음이 문제다** (매경, 테마진단 / 서승직 인하대 교수·건축학)  
 대기업과 시중은행의 고졸 채용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라. 지금 현실에서 고졸인력 고용창출도 중요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은 능력 중심 사회의 초석을 이를 총합적인 시스템

- 고졸인력을 숙련 전문가로 키울 로드맵을 구축해 희망을 갖게 하고, 궁극적으로는 고졸인력의 다양하고 참신한 재능을 인재로 키워 기업의 브랜드가 될 수 있게 해야
- 이를 위해선 고용창출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혁신적 정책 비전을 제시해 따르게 하고, 고졸 인력이 평생직장으로 머물 수 있도록 품격 있게 대우하는 시스템을 갖춰야

KDI 경제정보센터 홈페이지(epic.kdi.re.kr)에서 볼 수 있습니다. | 문의 02)958-4650 sslee@kdi.re.kr